



27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개회식에서 도이 디카코 일본 전 사민당 대표가 해외 참가자 대표로 축사를 하고 있다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女權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참석 여성·인권운동가들 역설

“저임금 노동강요·인신매매 가해자 처벌을”

27일 개막한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국내외 저명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인권회복과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집단상폭행의 역경을 극복하고 파키스탄 여성 인권운동의 지도자로 떠오른 무크타르 마이씨는 교육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거래수단으로 이용되는 파키스탄 여성의 처절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는 한편 여권 신장 운동의 핵심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조직화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같은 사회가 저지르는 실책 및 비현실적인 행태는 즉시 해결해야 할 세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 참의원 시미즈 스미코씨는 “현대의 노예제라고도 생각되는 저임금 노동의 강요와 연체적인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 여성 수입국과

송출국의 여성들이 연대해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가해자의 처벌을 해당 정부에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여성운동가 매리 콘드렌씨는 여성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Feminist)로서의 의식과 신념 강화 ▲윤리와 비폭력에 기반을 둔 부모다운 사고 개발 ▲무조건적인 혜성이 아닌 자비에 초점을 둔 행동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상적 정서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드렌씨는 “핵무기와 대량살상화의 토론회, 세계여성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주평화선언’, 내외신 기자회견, 폐막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간성을 보유한 상황에 처한 만큼 여성들은 생명 존중의 정신을 토대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명예위원장)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박광태·김필식 공동위원장장을 비롯해 도이 디카코 전 일본 사민당 대표 등 초청 인사와 시민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이 개막됐다.

포럼 마지막날인 28일에는 대학생과의 토론회, 세계여성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주평화선언’, 내외신 기자회견, 폐막공연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州日報

- 김종우



만년꼴찌!

하루 8시간 최저임금 3만160원

내년부터 8.3% 인상… 시간급은 3,77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들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시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062)220-0524
•직통:(062)227-9600
•FAX:227-9500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2차)

본 회사는 2007년 6월 14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바 본회사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제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제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주식회사 하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5-1
청산인 이병영

제권 판결

사 건 2007카공 99
신청인 김순남

광주 동구 두암동 허마이파트 102동 101호
승장장: 광주 동구 카ilton 547-18 법정지역

이법률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3. 7. 공시
최고를 하였는바, 그 종 라디오569124, 라디오569132에 대하여 2007. 5.

4. 신청인 김홍호로부터 권리인가 있고, 나머지 증서에 대하여는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6. 25. 16:00까지 권리인 신고나 청구 및 증서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앞수표
· 번 호: 바기10366831~바기10366882
· 금 액: 각금 5,000,000원(2회)
· 발행일: 2006년 11월 7일
· 발행인·기재인: 광주은행 경기지점
· 최후소지인: 김순남

2007년 6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정훈

제권 판결

사 건 2007카공 99

신청인 김순남

광주 동구 두암동 허마이파트 102동 101호
승장장: 광주 동구 카ilton 547-18 법정지역

이법률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 3. 7. 공시
최고를 하였는바,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 6.

25. 16:00까지 권리인 신고나 청구 및 증서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종 류: 자기앞수표
· 번 호: 바기10366831~바기10366882
· 금 액: 각금 5,000,000원(2회)
· 발행일: 2006년 11월 7일
· 발행인·기재인: 광주은행 경기지점
· 최후소지인: 김순남

2007년 6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정훈

면책결정 공고

사 건 2006하단605 면책

(2006하단616) 파산선고

파산자 나은희(701101-*****)

주 소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39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6월 27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박 성호

공고

오치우성아파트 조합원(농협, 수협, 축협, 고려시멘트, 월동일보)들에게 배당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지급기간 : 2007년 6월 28일 ~ 12월 31일

2. 배 당 금 : 250,000원

3. 구비서류 : ①본인: 신분증, 도장

②직계가족: 신분증, 도장, 출생증명

③통장: 통장번호

(직통은 상본 상에 명시된 예금주)

※ 연락처 : (062)266-5154

오치우성아파트조합위원회

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 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

문서 수사과장이 사건 현장 확인을 위해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

증명 명령을 내려 정당한 업무 행사를 못하게 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장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1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이 사건을 맡은 뒤

직접 수사에 참여하거나 수사를 지휘

했던 경찰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청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처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제도는 300m 이상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찜·탕류 쇠고기 제외)에 대해서만 국내산과 수입산, 수입 국가명 등을 메뉴판이나 팻말, 게시판 등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30평 이상 음식점부터

쌀·쇠고기 원산지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

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

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

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

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

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현행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

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

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골자로 한 식

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하고 밝혔다. 다만 쌀의 원산